

### “이재명 정부는 노정교섭으로 제조업 빨간불 해결해야”

#### 금속노조, 16일 총파업 돌입 ... ‘모든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등 촉구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제조업 위기 해결을 위한 노정 교섭과 모든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하루 일손을 놓았다.

한국지엠, 현대중공업, 모트라스 등 금속노조 조합원 6만 5천여 명이 16일 총파업 투쟁에 나섰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민주노총과 함께 서울, 부산 등 전국 11곳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이번 총파업 요구로 ▲노정 교섭 ▲작업중지권 보장 ▲노조법 개정 ▲회계공시·타임오프 폐기 등을 내걸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서울 총파업 대회에서 이재명 정부에 공급망·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정 교섭’을 제안했다. 장창열 위원장은 “(제조) 산업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정부가 대책을 만든다는데, 노동자를 빼고선 무의미” 하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노정 교섭을 열어 노동자들과 함께 답을 찾아야 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모든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을 최우선 요구로 다룬다. 장창열 위원장은 “이름뿐인 작업중지권이 아니라 제한 없고 보복 없는 작업중지권이 필요하다.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 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기업 문제도 제기했다. 장 위원장은 “한국오티칼하이테크, 한국지엠, PK밸브 등 한국 노동자들에 고통을 주고 벼랑 끝으로 내모는 외투기업과 사모펀드에 칼을 들자” 라며 “정부는 당장 외투기업 규제법 만들고 사모펀드 악행을 처벌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이날 총파업에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등 민주노총 다른 산별·연맹 조합원들도 동참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서울 집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를 자임했으나 노동자 삶을 바꾸지 못했다. 새 정부 초기지만 노동자들은 벼랑 끝이다. 정부에 노동자 요구를 똑똑히 전달하기 위해 투쟁할 수밖에 없다” 라고 밝혔다.

#### “노조법 2·3조 개정, 즉시 제대로 해야”

양경수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주문했다. 양 위원장은 “자본과 사용자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라며 “민주노총의 노조법 2·3조 개정 요구는 명확하다. 하청 노동자는 원청과 교섭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노조법상

노동자로서) 노동조합하고, 노동삼권이 손해배상 가압류로 훼손당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양경수 위원장은 회계공시·타임오프 등 윤석열표 반노동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양 위원

장은 “지난 3년 윤석열은 노조 파괴와 노동자 공격에 열 올렸다. 회계 공시로 노동조합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내몰았다. 타임오프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켰다” 라며 “드디어 윤석열이 감옥에 갔다. 윤석열 반노동 정책도 끝나야 한다” 라고 말했다.

## 노동부 손 놓은 사이 강원 ‘사람 장사’ 불법 업체 활개 금속노조·민주노총, 강원 지역 불법파견 실태조사 ... 고발장 접수

강원지역 노동법 위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파견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최저임금 위반 업체가 수도룩했다. 노동부는 특별감독 실시가 어렵다며 방임했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가 14일 오전 노동부 강원지청 앞에서 ‘강원지역 산업단지 불법파견 의심 업체 고발 기자회견’ 을 열고 지난 5월 12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강원지역 노동법 위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실상 불법을 방임한 노동부를 규탄하고 특별감독과 법 위반에 따른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불법 의심 업체 명단을 담은 고발장을 정식으로 노동부에 접수했다. 이번 실태조사 지역은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동화농공단지·동화일반산업단지 등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파견업체 29개 전체가 파견법 5조를 위반 혐의가 있다. 파견법 5조에 따르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파견 노동자 사용이 불법이다. 29개 업체 모두 알바 채용 플랫폼 등에서 ‘생산·건설·노무 전체’ 범위로 파견 노동자를 구한다.

파견 기간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 업체는 24개 다. 파견법 6조는 파견기간을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제조업 파견은 애초에 불법이고, 제조업 외 업무라 하더라도 근무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기재한 경우 기간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무허가 파견업체는 20개에 달했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노동부 근로자파견 사업 허가 업체 현황(2024.6.30. 기준)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무허가 파견이라고 분류했다. 금속노조는 ▲가짜 노동자 양상하는 3.3% 공제 ▲주 52시간 초과 ▲남녀 차등 임금 ▲수습 기간 불명확 등 기타 법 위반 사례도 적지 않다고 발표했다.

기자회견 참가 노동자들은 노동부에 △파견법 위반 의심 사용·파견사업체 특별근로감독 실시 및 결과 통보 △파견법 위반 시 벌칙 부과, 업체에 직접고용 의무 지시, 불법 파견업체 대상 허가 취소 조치 시행 △법 위반 시 체불임금 지급 등 조치 시행 등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고발 이후에도 강원지역 주요 공단에서 법 위반 실태 폭로 선전전, 노동법 상담, 당사자 법률 지원, 노동조합 설립 지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노동 환경 개선에 나설 것” 이라고 발표했다.